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헌 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고려대 전자공학과 졸업

청년환경센터 대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 위원
에너지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국회의원 보좌관 역임

에너지정의행동 대표(2010~)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2010~)
탈핵신문 운영위원, 편집위원
(2012~)

‘원자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방안 모색’ 연구
용역(2013, 사회공공연구소) 진행중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정부가 조만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 추진한다’고 결정한 지 거의 10년만의 일이다. 공론화 방식은 국내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이지만, 그간 정부의 계획 추진 강행-사회적 논란-백지화를 반복하며 19년 동안 9차례의 논쟁을 겪었던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를 볼 때 우리 사회의 한 단계 성숙한 의사 결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놓고 보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계획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말 핵발전소가 있는 5개 지자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되더니, 5월 중순으로 다시 잡힌 설명회도 울진군은 지자체의 거부로 날짜도 잡지 못했고, 5월 15일 열린 영광군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 모습만 지켜본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논의하자는 ‘공론화 계획’ 자체를 거부하고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 계획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진행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확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문서, 혹은 담화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론화 계획이 단지 문제의 해결책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03년 부안 방폐장 문제가 있었을 때부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시민 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일방적인 계획 발표와 강행, 혹은 관권, 금권 주민투표 논란이 있었던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이 어려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중간저장시설의 확정 및 착공'을 발표한 바 있고, 다른 한쪽에선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한 핵연료의 재처리(혹은 재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재처리 연구 시설과 실험고속로 연구 시설을 연계하는 제2원자력연구원(혹은 원자력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언급이 몇 년 전부터 있으면서 삼척시, 경북도 등이 시설 유치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중간 저장 시설이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거나, 중간 저장 시설에 재처리 시설 및 각종 연구 시설이 들어와 새로운 핵연구단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 논의 참여가 자신의 지역에 신규 핵발전소, 혹은 핵시설 건설과 연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공론화=고준위 핵폐기장 선정 공론화', '(공론화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피켓을 들고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일들이다.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미약하다. 말 그대로 '(그렇지 않으니) 믿어 달라'는 것이 전부이다.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이

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정부는 믿어달라고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헤프닝' 속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획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패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 계획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단순한 여론 조사나 몇 차례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와 분명히 다르며, 찬성과 반대 두 가지 문제로만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적극적인 상호 참여 속에 논의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불신을 어느 순간 갑자기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정확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문서, 혹은 담화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다고 해도 현재의 불신이 100%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의혹을 풀고 한 단계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론화 계획이 단지 문제의 해결책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획이 무산된다면, 남은 것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계획 진행과 혼란, 백지화라는 낡은 방식으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19년 동안 혼란과 갈등을 반복했던 그 방식 말이다.

이런 과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